

모 언론사 광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 영향 증거 못찾아”

민주당 선관위 보고서...재심위 이번주 최종결정 주목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문제와 관련, 민주당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지난 주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 주 내에 재심위(공직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선관위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실시된 모 언론사의 ARS 여론조사가 경선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재심위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3일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 공명선거 분과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의결하고 재심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모 언론사의 ARS 여론조사가 경선 자체는 물론 정당원 여론조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선거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A 변호사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서는 사실 관계를 위주로 기술했다”며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ARS 여론조사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나 정당원 여론조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당 실무진들은 지난 15~16일 광주를 직접 방문, ARS 여론조사와 관련, 현지 실사에 나서 자료를 수집해 선관위에 넘겼으며 선관위 공명선거 분과위원회는 실사 보고서와 후보자들의 소명, 각 후보 측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재심위에 제출했다.

재심위는 선관위의 최종 보고서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광주시장 후보 경선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 뒤 이후 2~3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위가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할 경우,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 확정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반면, 재심위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광주시장 후보 확정과 관련, 최종 결론을 내린다.

한편,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김동철 광주시장위원장, 김영진 의원, 조영택 의원 등은 지난 23일 회동을 갖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광주 국회의원들은 “광주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며 “광주시장 후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 남부지법도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이 제기한 경선(당선인) 무효 가처분 신청과 관련, 오는 28일 최종 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문제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가닥이 지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1차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당무에 심대한 지장이 야기된다'면서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5일 오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마련된 '천안함 46용사 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순국장병 5일간 해군장 29일까지 국가애도

광주·전남 곳곳 분향소

천안함 순국 장병들에 대한 장례절차가 25일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29일까지 해군장으로 진행되는 5일간의 장례기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을 '국가애도의 날'로 정했다.

<관련 기사 5·6면>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천안함사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오늘부터 29일까지 해군장으로 엄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순국한 46명의 장병에게 1계급 추서와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키로 했다.

영결식은 29일 2함대 내 안보공원에서 유가족,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주요인사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되며, 같은 날 오후 3~4시 국립대전현충원 합동묘역에 유해가 안장된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에 모든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리본을 착용토록 했으며, 영결식날에는 전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 한편 정각 10시에 사이렌을 울려 1분간 추모 묵념을 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정된 축제와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의 자제를 당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간소하게 치르도록 했다.

한편, 대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2함대사령부 내 체육관은 이날 오후부터 각계각층의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 김태영 국방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장성 등 30여명이 합동분향소를 방문, 유가족들을 찾아 일일이 조문했다. 정 총리는 방명록에 “당신들은 우리시대의 영웅들입니다. 명복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외 국무위원 일동”이라고 기재했다.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평택 2함대 외에 광주·전남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32곳이 설치됐다. 분향소는 오는 29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9일은 오후 6시)까지 조문객을 받는다. 광주·전남에서도 박준영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이날 순천 연향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하는 등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군과 민간인양팀은 앞서 천안함 침몰 30일째인 지난 24일 합수 인양작업을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박성균 하사의 시신을 발견했다. 군은 박 하사를 마지막으로 나머지 6명의 장병은 산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홍형기 기자 redplane@연합뉴스

광주 시의원 80% 물갈이

민주 후보 19명 중 현역은 4명 그쳐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다란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법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시의원 '물갈이'가 현실화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4~25일 이틀간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지역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 현역 의원 4명만이 시의원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민주당의 시의원 후보 중 경선을 통과한 현역은 손재홍·나종천·진선거·호준환 등이다.

경선을 통과한 이들 4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의원 19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원의 현역 생존율은 21%에 그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까지 19개의 광역의원 선거구 중 경선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심이 제기된 선거구 3선거구와 남구 2선거구 2곳을 제외한 17개 선거구에서 17명의 시의원 후보를 선출했다.

또, 광주 25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59명의 후보가 선출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천안함 수중무기에 의한 비접촉 폭발”

민·군합조단 “어뢰·기뢰 가능성” 잠정 결론

천안함이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 수중에서 어뢰나 기뢰 등으로 추정되는 수중무기에 의한 '비접촉 폭발'로 침몰했다는 잠정 결론이 났다.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의 윤덕용 공동조사단장은 25일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2차 현장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선체 절단면 및 내·외부 육안검사 결과 수중폭발로 판단된다”면서 “수중 접촉 폭발보다는 비접촉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기뢰와 어뢰에 의한 폭

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뢰나 어뢰 등의 무기체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무기체계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정운찬 총리의 대국민 담화후 기자회견의 일문일답에서 “기본적으로 증거력에 의한 버블제트(물기둥)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지

만, 그 외의 다른 방법도 조사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윤 단장은 “절단면의 찢어진 상태나 안으로 심하게 휘어진 상태를 볼 때 수중폭발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체 내·외부에 폭발에 의한 그늘과 열에 녹은 흔적이 전혀 없고 파공된 부분도 없으므로 비접촉 폭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폭발의 위치는 터빈실 좌현 하단 수중 어느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현장 합동조사에는 민·군 전문가와 미국, 호주 해군 조사팀 등 43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